

‘들쭉날쭉’ 국내산 흑염소 가격...축산농가 ‘흑빛’

보양식 수요 늘어도 산지값 하락...축협 경매가 ‘반토막’ 유통·생산 이력제 없어 수입산 등 출처 불명 고기 유통 식당가 “물량 많고 가격 안정적인 수입산 쓰는 게 현실”

개 식용 금지법 시행으로 복날 여름 보양식인 염소 고기를 찾는 수요가 몰리고 있으나, 정작 염소 값은 반토막이나 전남 축산 농가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전국 최대 염소 사육지역인 전남 축산 농가의 경우 소, 돼지와 달리 염소는 축산물이력제에도 포함되지 않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어 가격이 시시각각 요동치고, 출처불명의 염소 고기가 유통되는 등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15일 화순 축협 경매장에 따르면 염소의 kg당 낙찰가(거세염소 기준)는 지난 8일 9136원으로 1년 전(10월 9일) 1만 9306원에 견줘 반토막이 났다.

강진 경매장에서는 지난 7일 염소가 kg당 8599원에 거래됐는데, 이는 지난 1월 평균 낙찰가인 1만 9235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보성 경매장에서도 지난해 평균 kg당 2만원대였던 염소 낙찰가가 올해 1만1000원대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염소 산지 가격도 요동치고 있다. 염소 산지 가격은 지난 2018년 30만원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마리당 100만원까지 치솟더니 올해 3월부터 산지

가격이 급락, 이달 기준 마리당 72만원에 형성되고 있다. 지난해 말 대비 28%나 하락했다.

강진군에서 염소를 키우는 김동선씨는 “농가에서 가격을 조절할 능력도 없고 가격이 오르면 떨어지든 마냥 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요동치고 있다”며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 중간 상인들이 비쌀 때 샀던 염소를 재고로 쌓아두고, 물량이 안 풀리다 보니 가격이 더 내려가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시의 한 염소 식당 대표는 “염소를 구입해 오는 가격이 지난 여름보다 15~20% 이상 떨어지면서 가격을 어떻게 매겨야 할지도 혼란스럽다”며 “단가를 안정적으로 맞추려다 보니 국내산은 안 쓰게 되고, 물량이 많고 가격 변동폭이 적은 호주산 수입 염소 고기를 쓰게 되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불안정한 가격 변동 때문에 국내산보다 수입산 염소를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축산업계는 염소 가격 낙폭이 큰 이유로 국가적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꼽고 있다. 닭, 오리, 소, 돼지 등이 산업 동물로 지정돼 국가가 유통

과 생산 등에 관여하는 것과 달리, 염소, 사슴 등 ‘기타 가축’들은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염소 사육두수가 증가한 반면 경기 불황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된 점도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전남도 분석이다.

농가와 축협에서는 염소는 이력제가 없어 개체 출처, 이동 경로, 소비처 등 유통 이력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제기했다. 유통하는 상인들 말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어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부 등 공적 시스템 기반이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가격이 폭락해도 원인을 어렵지만 할 수 있을 뿐, 구체적인 원인 분석을 할 수도 없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특히 전남 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염소를 사육하고 있는 만큼, 관리 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3년 말을 기준으로 전남의 염소 사육 마리수는 10만 3792마리로, 전국 42만 3430마리 중 24.5%를 차지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염소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50kg 거세염소 한 마리당 70~80만원의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염소 산업을 브랜드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정책을 도입하는 등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용지 덮은 연꽃 15일 오후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에서 시민들이 연꽃이 핀 용지 주변 산책로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4대 참사’ 유가족 이재명 대통령 만난다

오늘 세월호·이태원·오송지하차도·제주항공 유가족 간담회

세월호·이태원·오송지하차도·제주항공 등 이른바 ‘4대 참사’ 유가족들이 16일 이재명 대통령과 간담회를 갖는다.

15일 유가족들에 따르면 4대 참사 유가족 200여명은 16일 오후 3시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는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국가적 참사 유가족 경정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간담회는 새 정부에서 신설된 대통령실 경정통합수석실이 주관한다.

국회의원과 국토부 등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희생자 가족간의 대화도 이어질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에서는 참사가 일어난 원인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유족 지원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12·29 제주항공 유가족협의회 소속 유가족 50여명은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미흡한 조사에 대해 규탄하고 진상 규명에 대한 요구

를 할 계획이다. 무안공항에서 지내고 있는 유족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요구할 방침이다.

세월호참사 유가족 90여명도 참석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마무리하지 못한 참사 진상 규명과 남아있는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새로운 진상 조사 기구를 만들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오는 1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250여명을 대상으로 사고 여객기 엔진 조사 결과에 대한 유가족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도의회 “전남기록원 건립 과정 부실 투성이”

“용역업체 선정 과정 등 문제”

전남도의회가 전남도가 추진 중인 전남기록원 건립 사업의 부실 용역 문제를 꼬집었다.

전경선(민주·목포5) 전남도의회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전남기록원 건립 사업은 도비만 645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임에도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부터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전남기록원 건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수행한 업체가 당초 약속한 연구진 10명 중 4명만 투입한 사실을 집행부가 용역 만료 직전 확인하고도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금액만 감액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이는 지방계약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감독 책임을 다 하지 않은 것”이라며 “용역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채 사업 감독을 맡았던 직원의 퇴사 배경도 의문스럽고, 집행부와 업체 간 유착 가능성까지 의심되는 상황”

이라고 강한 의혹도 제기했다.

오미화(진보당·영광2) 전남도의원도 전남기록원과 관련, “공정성 있는 시스템 마련을 위해 해당 용역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객관적인 감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입찰 공고엔 분명하게 연구원 자격 요건이 명시되어 있었는데, 실제 용역 수행 과정에서는 계획된 인력을 제대로 투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집행부가 알았음에도 용역을 계속 진행했다”며 “단순히 건의 부실 용역 문제를 넘어, 용역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계약 이행 관리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폭염 속 노동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화

오는 17일부터 폭염 속 일하는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는 게 의무화된 다.

정부는 이번 규정 개정안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폭염 고위험 사업장 약 4000여 곳을 중심으로 불시 지도·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체온온도가 33도 이상인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현장 여건에 따라 1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

작업의 성격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자의 체온 상승을 줄일 수 있는 개인용 냉방장치를 가동하거나 개인용 보냉장구를 착용하게 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노동부는 또 35도 혹은 38도 이상의 폭염 작업 시 매시간 15분씩 휴식 공간에서 휴식을 제공하게 하는 등 추가 조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개정안에는 폭염 상황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가 해야 할 보건조치가 명문화됐다.

사업주는 31도 이상 폭염 작업 시 냉방·통풍장치 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주기적인 휴식 부여 등에 나서야 한다. 시원한 물을 충분히 비치하고, 온열질환(의심)자 발생 시 119에 즉각 신고해야 한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1985-2025

40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

전문건설인 대한민국을 세우다!

「대한전문건설협회, 40주년 혁신적인 건설문화를 선도합니다!」